

금연구역 확대하면 뭐하나... 광주·전남 과태료 2건뿐

8월 교육시설 금연구역 확대 학교 인근 주민 흡연 '여전' 범위는 넓고 단속자는 없어 광주, 1인당 37개 학교 맡아 "적극홍보·단속강화 나설 것"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으로 일선 학교 등 교육기관 인근 금연구역이 대폭 확대됐으나, 단속과 과태료 부과 실적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또 단속 면적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구역만 확대됐을 뿐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19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근 금연구역을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했다. 간접흡연으로부터 성장기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취지로 통학로 등 일부 구역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초·중·고교 등 학교시설 역시 경계로부터 30m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광주·전남에서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교육시설은 △광주 1437개소 △전남 2209개소에 달한다.

하지만 여전히 광주·전남 시내 학교시

설 인근에서는 흡연이 끊이지 않아 개정안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날 광주 시내 교육시설 10여 곳을 둘러본 결과, 정문 주변과 학교 주변 화단·배수구 등에서 손쉽게 담배꽂이를 찾을 수 있었다. 일부 구역에서는 아예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흡연을 하고 있는 모습도 목격됐다.

특히 이런 흡연 장면을 자녀들의 등교 길에 목격한 학부모들은 "금연구역 확대를 한 것이냐"고 반문하고 있다.

초등생 자녀를 둔 박모(43)씨는 "금연구역 확대 소식을 듣고 적어도 학교 근방은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면서 "통학로 앞에서까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자주 보고 있어 효과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 개정안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연구역 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단속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금연구역 확대 이후 교육기관 인근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실적은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1건씩 총 2건, 20만 원에 불과했다. 주의 및 지도 횟수 역시 광주 55건, 전남 1건에 그쳤다. 법적 금연구역 범위는 확대됐지만,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니 누구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력 부족이라는 지자체의 만성적인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단속 범위는 확대됐지만, 인원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담당인력 한명 당 소화해야 할 구

역이 너무 광범위하다. 당연히 단속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현재 광주는 단속 인력 39명, 전남은 98명으로 이들이 관내 학교 주변을 포함한 모든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시설만 단속한다고 가정해도 한사람 당 많게는 37개 학교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제대로 된 법 정착은 기대하기 힘들다.

광주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관내 7000여곳의 금연구역이 있지만, 일선에서 금연구역을 담당하는 인력은 10명이 채 되지 않고,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현장적발이 돼야 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SNS와 현장 홍보 등을 통해 금연에

방 문화를 확산하는 동시에 교육시설 인근과 민원 주요 발생지 위주의 현장 단속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성인 흡연율은 광주 18.4%, 전남은 19.4%로 전국 평균인 17.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사진=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북구, 겨울꽃 단장 광주 북구청 공원녹지와 직원들과 북구청어린이집 원생들이 19일 북구청 광장에서 비올라, 꽃배추 등 겨울꽃을 식재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수거차량 초등생 참변 유족, 5명 고소... 관리소장 등 안전 책임 물어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의 유족이 안전관리 의무를 어겼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수거업체 대표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19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7)양의 유족이 전남 폐기물 수거업체와 아파트 관리소장,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5명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수거차량 운전자 A씨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

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차량이 소속된 수거업체 대표,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등 4명에게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교육·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1시20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 앞 인도에서 김모 양이 후진하던 5톤 재활용 수거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윤준명 기자

범죄 현장 압수품 빼돌린 전직 경찰, 징역 2년

빛 청산 목적... 증거 보관실서 절도

개인 빛을 청산하기 위해 경찰서 증거물 보관실에 있던 현금 몰래 빼돌려 쓰거나 가로챈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전경태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증거은닉, 절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전 경위는 완도경찰서에 재직하던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5차례에 걸쳐 경찰서 통합증거물 보관실에 압수돼 있던 현금 3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수사하던 강도치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 증거물인 현금 92만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것처럼 사문서와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개인 빛을 갚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가 경찰 내부 장기 계류 사건 점검과정에서 범행이 들쭉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본분에도 형사사건 압수물을 훔치거나 횡령하고, 사문서위조와 공전자기록위작 등을 반복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이 경찰조직과 대한민국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남경찰은 A 전 경위의 범행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또 증거물보관실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압수물 관리담당 팀장 등 2명에게도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민현기 기자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